이슈브리프 Issue Brief

NO. 06
2020.06.15.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인식 및 요구

배은주 外 / 도시경영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배경과 목적

- 급증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5월부터 대폭 감소하면서 진정 국면을 맞이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모델을 전환하였으나, 조용한 전파와 감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비롯하여 경제위기, 고용악화, 여가활동 제약 등으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위기를 감내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천시 정책 대응을 제언

정책제안

- 감염 대응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의료 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필요
  -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의료 및 행정 체계 정비 필요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다층적 경제회복 정책 필요
  -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자영업,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다양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가계의 소득감소로 귀결
- 코로나19의 지속과 비대면접촉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 및 스트레스 완화 정책 필요
  - 비정규직과 자영업, 돌봄가족, 디지털 취약계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심각

주제어 : 코로나19, 스트레스, 돌봄, 온라인 여가활동, 소득감소, 생계위기, 방역, 의료체계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1 코로나19 시민 설문조사 목적 및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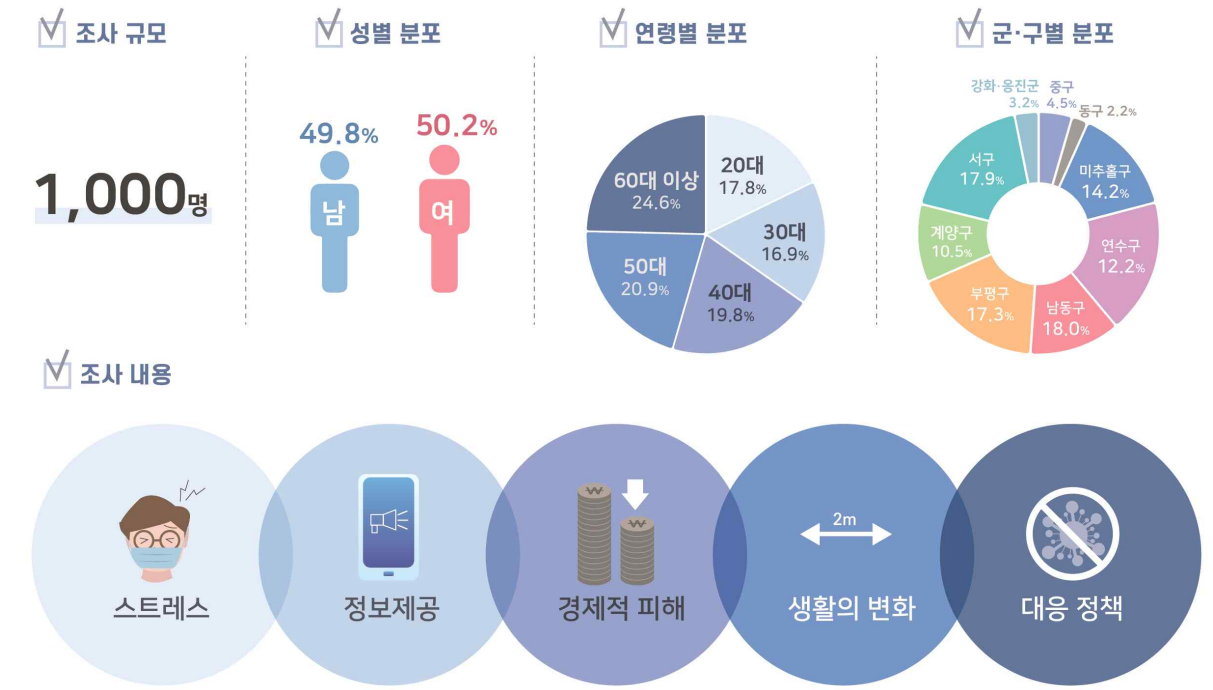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입 이후 인천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위기의식 팽배
- 인천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대책 마련에 고심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인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피해에 대한 인식,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요구를 조사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

● 조사 방법 및 대상

- 조사기간: 2020년 5월 15일 ~ 20일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주, 리얼미터)
-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온라인 패널 프레임 내 유의할당 후 무작위 확률표집)[1)]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1)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사후가중

2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1) 시민들의 심리상태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인천 시민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심각'

❑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은 모든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심각' 수준

- 시민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67.7%로 ('매우 심각' 19.2%, '다소 심각' 48.4%)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심각한 상태
- 스트레스 수준은 성별, 연령, 지역, 학력 등 응답자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심각 수준

※ 경기도민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64.9%)와 불안감(67.4%) 수준도 인천 시민 조사결과와 유사함(김정훈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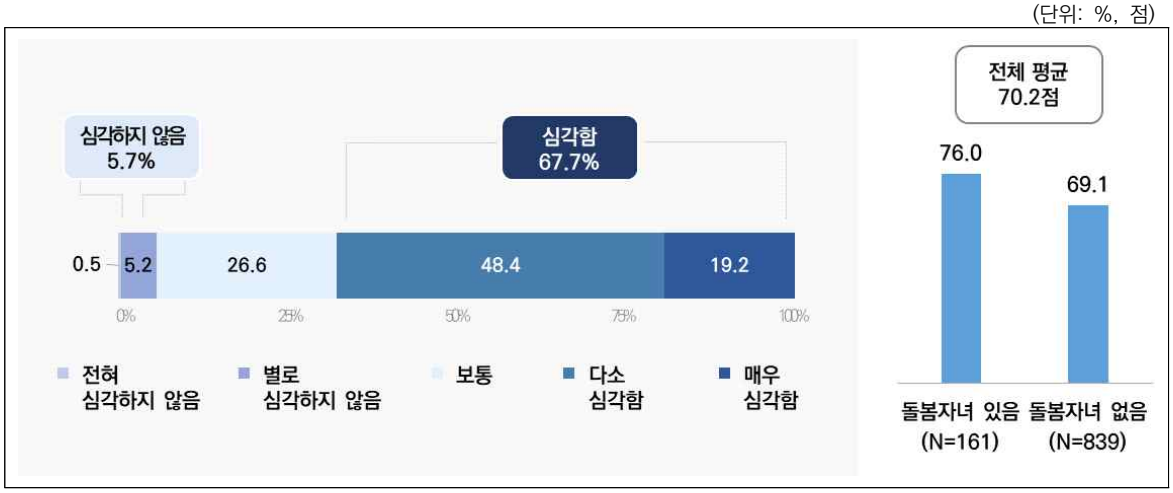
※ 소셜빅데이터 분석(Some Trend) 결과에서도 지난 3~4월 '코로나' 연관어는 '확산', '힘들다', '위기', '우려' 등이 크게 부각되어,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음을 알 수 있음(박지혁, 2020)

❑ 특히, 가족 구성원 중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자영업 등의 스트레스 수준은 더 높음

- 스트레스 수준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점할 경우, 가구원 중에 영유아 및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등 돌봄자녀가 있는 응답자(76점)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돌봄자녀가 없는 사람(69.1점)에 비해 다소 높음
- 특히, 돌봄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스트레스 수준은 돌봄자녀가 있는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음
- 또한, 자영업(74.8점), 고용주·자영업자(76.6점)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다른 직업군보다 가장 높은데, 이는 이들의 경제적 피해 체감도가 매우 높은 것과 연관

[그림 1]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단위: %, 점)



● 연령이 낮을수록 '주변인에게 전염',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 감염 자체'를 우려

❑ 인천 시민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주변 사람들로의 전염(46.0%)'을 가장 우려

- 그 다음으로 '감염 그 자체(35.7%),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7.9%)', '주변의 비난(5.1%)'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이 '주변으로의 전염'이라는 점은 경기도민 설문조사(김정훈 외, 2020) 결과와도 일치, 이는 코로나19가 전염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이라는 점에서 비롯

❑ 다만, 고연령층, 저소득층에서는 '감염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남

- 전체적인 경향성과 다르게 '감염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응답한 계층은 고연령층인 50대(40.3%)와 60대 이상(44.3%), 저소득층(44.5%) 등임
- 더불어, 노인1인가구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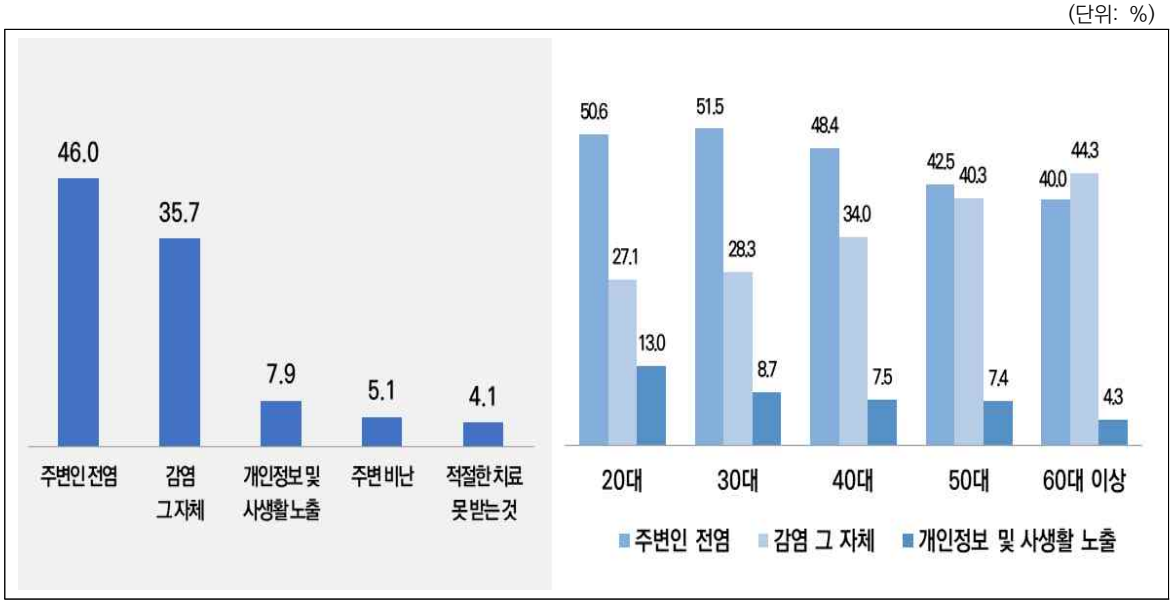
❑ 젊은 연령, 고학력층 등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좀 더 민감한 경향

- 20대(13.0%)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11.7%) 등에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적 경향(7.9%)보다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여 논란이 발생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디지털데일리, 2020. 03. 15.)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란 발생

[그림 2] 코로나19 감염 시 가장 두려운 것

(단위: %)



2) 시민들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획득

● 코로나19 관련 정보 중 '인천과 거주지의 신규확진자 현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 시민들은 코로나19 관련 '인천과 나의 거주지 관련 신규확진자 현황(44.2%)'에 높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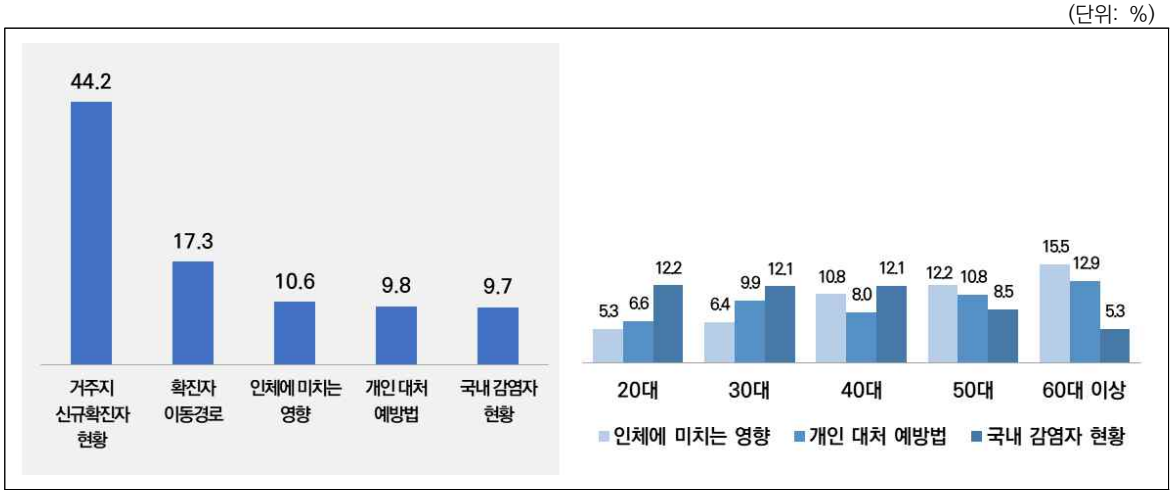
- 다음으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17.3%), '인체에 미치는 영향'(10.6%), '개인 대처와 예방법'(9.8%), '국내 감염자 현황'(9.7%) 순임

❑ 고연령층일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 대처 예방법'에, 저연령층일수록 '국내 감염자 현황'에 높은 관심

- 연령대에 따라 관심 정보가 다른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50대(12.2%)와 60대 이상(15.5%)의 관심이 전체보다 높은 반면, '국내 감염자 현황' 정보에는 20대(12.2%), 30대(12.1%)가 전체보다 높은 관심을 보임

[그림 3] 코로나19 관심 정보

(단위: %)



●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TV뉴스', '재난정보 안내문자',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획득

❑ 과반의 응답자가 'TV뉴스'와 '휴대폰 재난정보 안내 문자' 및 '인터넷 포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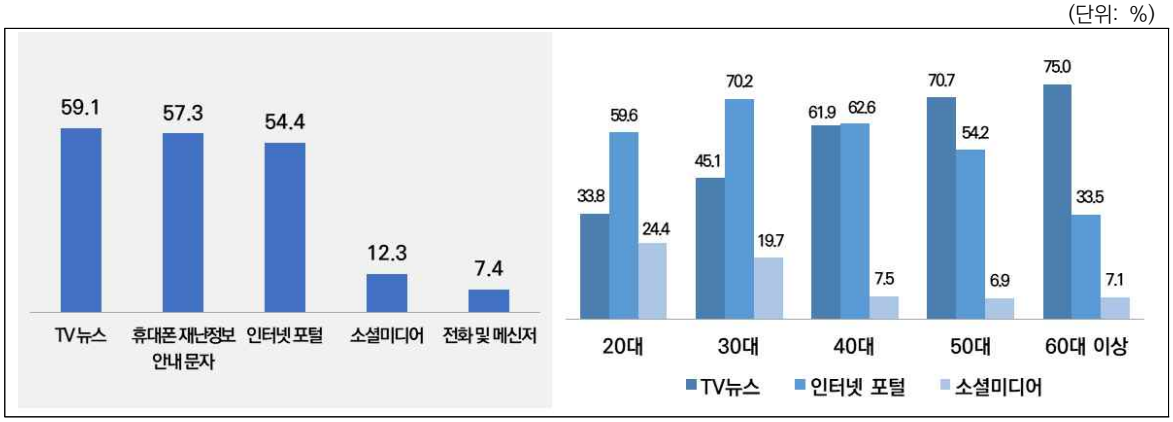
-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매체로 TV뉴스가 59.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재난정보 안내문자(57.3%), 인터넷 포털(54.4%), 소셜미디어(12.3%) 순임

❑ 고연령층일수록 'TV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젊은 20~30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50대(70.7%)와 60대 이상(75.0%)은 'TV뉴스'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획득
- 반면, 30대(70.2%)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주로 정보를 획득
- 20대는 재난정보 안내 문자(67.2%), 인터넷 포털(59.6%), 소셜미디어(24.4) 순으로 다른 연령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코로나19 정보 입수 매체

(단위: %)



주: 다중응답, 퍼센트는 응답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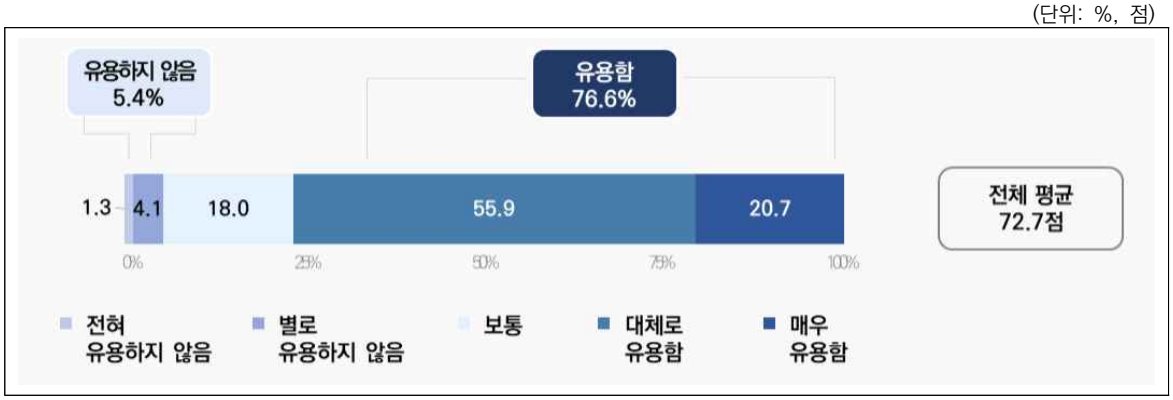
⬢ 인천 시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송하는 '재난정보 안내문자'가 유용하다고 평가

❑ 인천 시민 다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발송하는 재난정보 안내 문자가 '유용하다'고 생각

- '재난정보 안내문자'가 유용하다는 응답이 76.6%(매우 유용 20.7%, 대체로 유용 55.9%)이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8.0%임
- 돌봄자녀가 있는 경우 재난안내문자의 유용성을 더 높게 평가
- 반면, 1인가구(63.4%)와 저소득층(64.6%)에서는 재난안내문자의 유용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그림 5] 코로나19 재난정보 안내문자의 유용성

(단위: %, 점)



3)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인식

⬢ 고연령층, 자영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생계 및 경제 위기' 심각

❑ 인천 시민은 '생계 및 경제 위기'가 가장 큰 피해라고 인식

-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가장 큰 피해에 대해 '생계 및 경제위기(28.6%)', '개인 불안 및 스트레스(13.9%)', '생명과 건강 위협(12.7%)', '사회적 혼란(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생계 및 경제위기'를 지적하는 것은 경기도민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임(김정훈 외, 2020)

❑ 고연령층(50~60대)은 '생계 및 경제위기'를, 20대는 '문화여가 활동 제약'을 높게 인식

- 50대(36.2%)와 60대 이상(32.6%)의 '생계 및 경제위기' 응답비율이 전체(28.6%)보다 높음
- 반면, 20대에서는 '문화여가 활동 제약(22.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생계 및 경제위기(20.3%)' 순임

❑ 자영업, 생산서비스직과 비정규직, 고용주 및 자영업자 중심으로 '생계 및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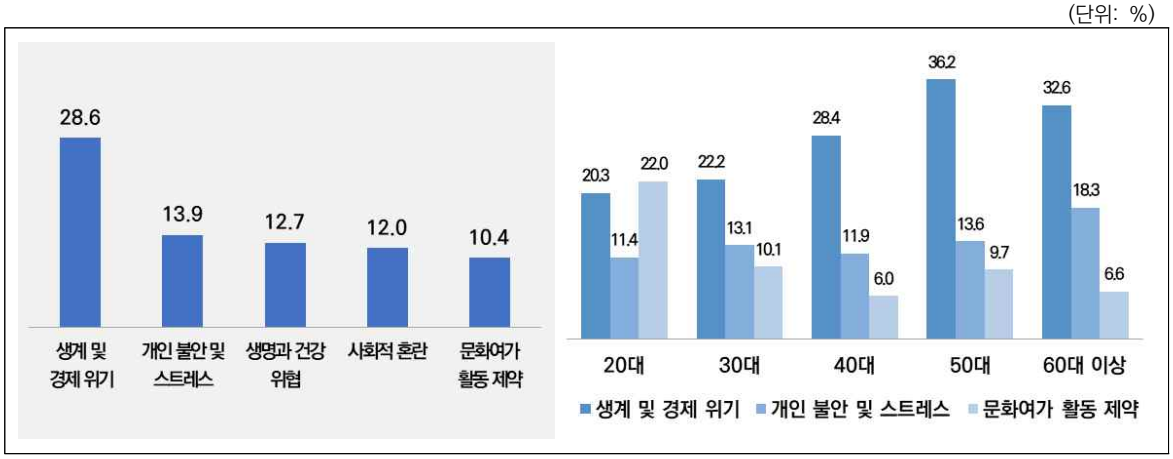
- 직업별로는 자영업(54.0%), 생산 및 노무직, 판매 및 영업 등 생산서비스직(40.7%), 고용 형태별로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49.3%), 기간제노동자(34.7%), 의존도급 및 인턴 등(32.3%)에서 '생계 및 경제위기'라는 응답 비율이 전체(2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2)]

※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점은 경기도에서도 확인되는 일반적 현상임(김정훈 외, 2020)

- 반면, 가정주부는 '생명건강 위협'이 21.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생계 및 경제위기(21.4%)', '개인불안 및 스트레스(19.1%)' 순임

[표 6]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개인적 피해

(단위: %)



2) '의존도급'이란 프리랜서, 배달업, 방문교사 등의 업종을 일컬음

⬢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가정경제 피해는 '소득감소'

❑ 자영업, 생산·서비스직, 비정규직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심각

- 직업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경험 비율은 전문사무직(64.5%)보다 생산 및 서비스직(82.4%)과 자영업(93.8%)에서 더 크게 나타남
- 또한, 고용 형태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경험은 고용주·자영업자(93.8%), 의존도급 및 인턴 등(91.3%), 기간·단기 노동자(79.1%), 정규직(66.7%) 순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경제적 피해 경험 비율의 격차가 심각함

❑ 인천 시민의 절반(50.0%) 가량이 코로나19 위기로 '소득감소'를 가장 많이 경험

- 다음으로 '근로(영업)시간 감소(17.5%)', '구직 애로(16.7%)', '유·무급 휴직(14.9%)', '실업(실직) 발생(12.7%)', '일시적 휴업(11.6%)', '폐업(2.6%)' 순임

❑ 고연령층은 소득감소, 저연령층은 구직애로에 어려움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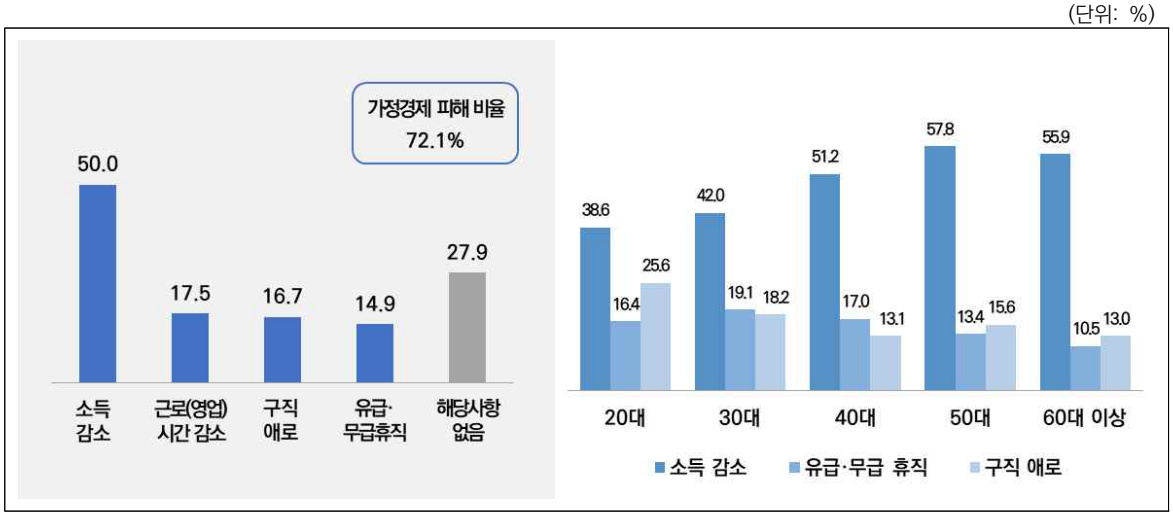
- 50대(57.8%)와 60대 이상(55.9%)에서 저연령층인 20대(38.6%)와 30대(42.0%)보다 소득감소의 경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남
- 한편, 20대의 경우 소득감소(38.6%)에 이어 구직애로(25.6%)의 어려움이 크게 나타남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 구직애로 등 가정경제 피해의 체감 유형 다양

- 저소득층은 경제피해 경험 비율이 78.4%로 고소득층(40.2%)보다 2배 가까이 높음
- 또한, 저소득층은 소득감소(55.4%), 구직애로(27.1%), 근로시간 감소(21.1%)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남

[그림 7] 코로나19가 미친 가정경제 피해 내용

(단위: %)



주: 다중응답, 퍼센트는 응답자 수 기준

⬢ 인천 시민 과반이 이전보다 30% 이하의 소득감소를 경험

❑ 인천 시민 70% 이상이 코로나19 위기로 가정의 소득감소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소득감소 정도는 11~30% 정도(27.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1~50% 정도(17.2%), 10% 이하 감소(15.5%) 순으로 나타남
- 소득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8.2%에 불과하여, 정규직(66.7%), 전문사무직(45%) 종사자 중에서도 소득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연령, 저소득층, 고용주·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이 소득감소 영향을 더 체감

- 노인1인가구(독거노인)의 소득감소 체감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79.5%)이 고소득층(61%)보다 소득감소 체감 비율이 더 높음
- 직업별로는 전문사무직(65%)에 비해 생산 및 서비스 직종(81.7%), 자영업(94.8%)의 소득감소 체감 비율이 더 높음
- 고용형태별로는 소득감소 체감 비율이 정규직(65.8%)에 비해 기간제 노동자(85.2%), 고용주·자영업자(95.6%), 의존도급 및 인턴 등(85.5%)이 더 높아,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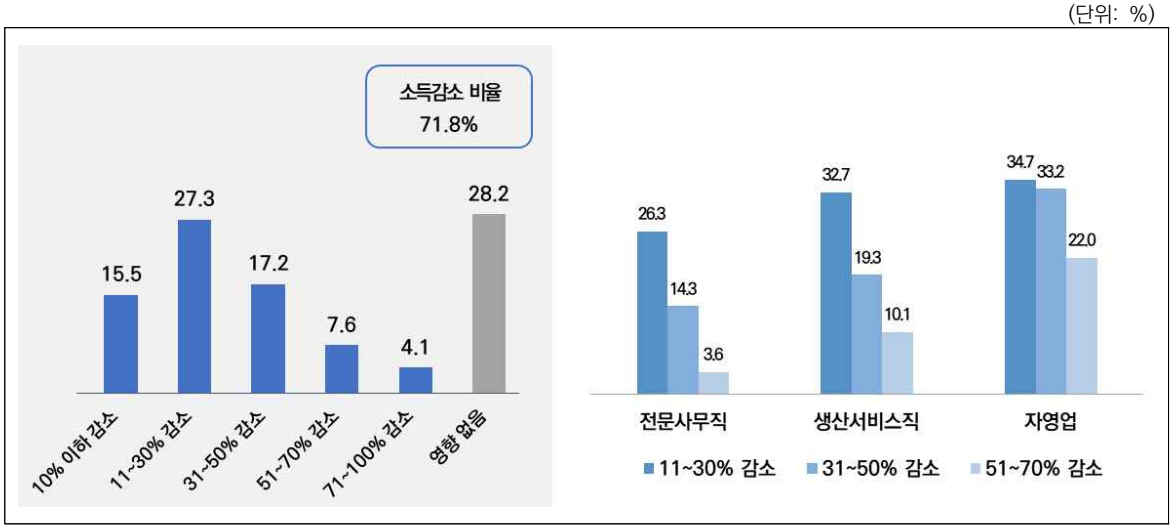
❑ 특히, 인천시 자영업의 소득감소 정도는 매우 심각 수준

- 자영업의 58.5%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30% 초과의 소득감소를 경험하여, 자영업의 경제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코로나19로 가계사정 악화가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경기도, 부산시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일반적 현상임(김정훈 외, 2020; 손현일 외, 2020)

[그림 8]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정도

(단위: %)



● 인천 시민 다수가 소득감소의 영향으로 소비감소 체감

❑ 인천 시민 80% 이상이 코로나19 위기로 소비를 줄여 생활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비감소 정도에 대해 '11~30%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 이하 감소' 24.7%, '31~50% 감소' 15.3% 순으로, 약 80% 이상이 소비감소를 경험

※ 'KDI 경제동향 5월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 감소를 들고 있는데, "3월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 생산이 급감하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위축됨"

❑ 소득감소의 체감도가 큰 고연령, 저소득층, 비정규직 중심으로 소비감소 체감 비율 높음

- 고연령층(50대 79.4%, 60대 이상 81.9%)의 소비감소 체감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비감소를 경험한 비율(저소득층 86.6%, 고소득층 71.1%)이 더 높음
- 정규직(75.3%)보다 비정규직(85.2%)의 소비감소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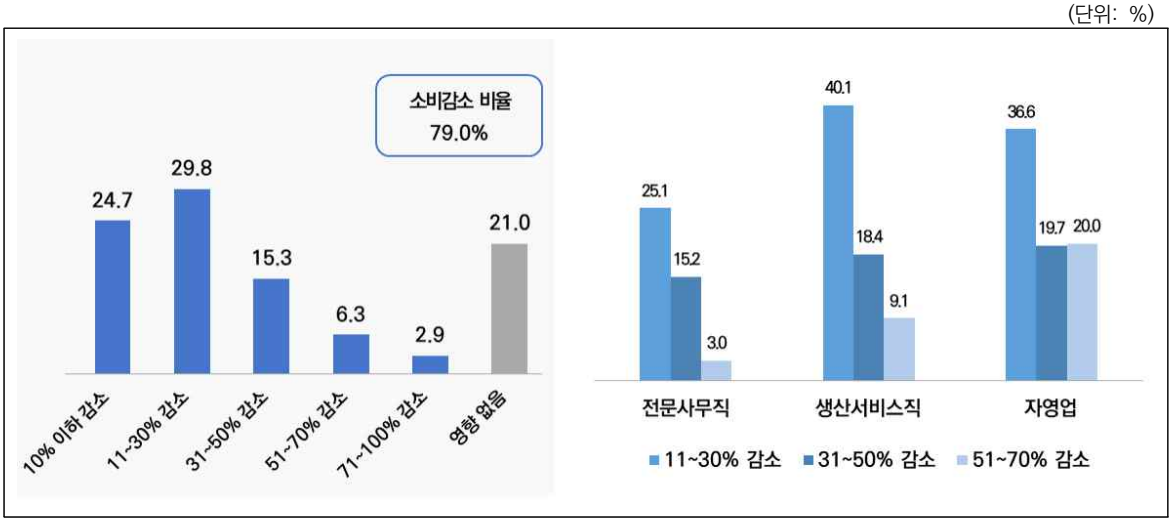
❑ 특히, 자영업의 경우 소득감소와 마찬가지로, 소비감소 체감 수준 심각

- 자영업의 40% 이상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30% 이상의 소비감소를 경험하여, 자영업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함

※ '닐슨 글로벌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료품, 교육, 커뮤니케이션, 의료 서비스 지출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난 반면 여행, 대중교통, 저축 및 투자, 외식 및 의류비 지출은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 현상은 전 세계적 현상임

[그림 9]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비 감소 정도

(단위: %)



4)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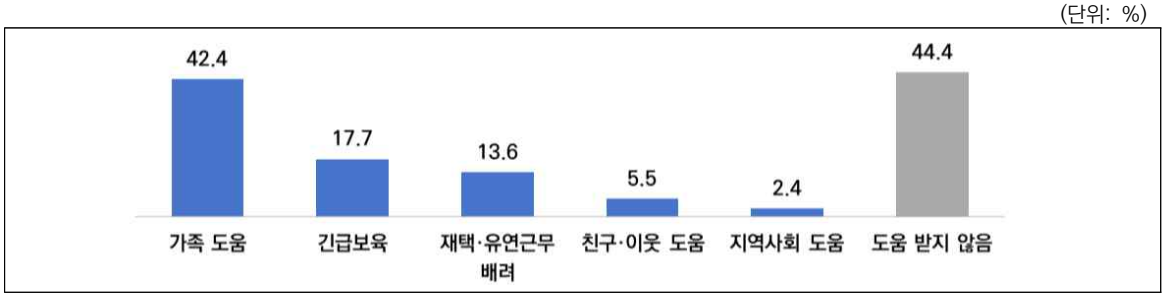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 시 가족의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가족 내에서 해결

❑ 돌봄이 필요한 자녀(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장애아 등)의 돌봄 서비스는 '직접 돌봄(44.4%)', '가족의 도움(42.4%)' 순으로, 대부분 가족 내에서 해결[3)]

- 다음으로 '긴급보육(보육 및 교육기관)' 17.7%, '직장의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유연근무) 등 배려' 13.6%, '친구, 이웃의 도움' 5.5%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돌봄에 대한 도움 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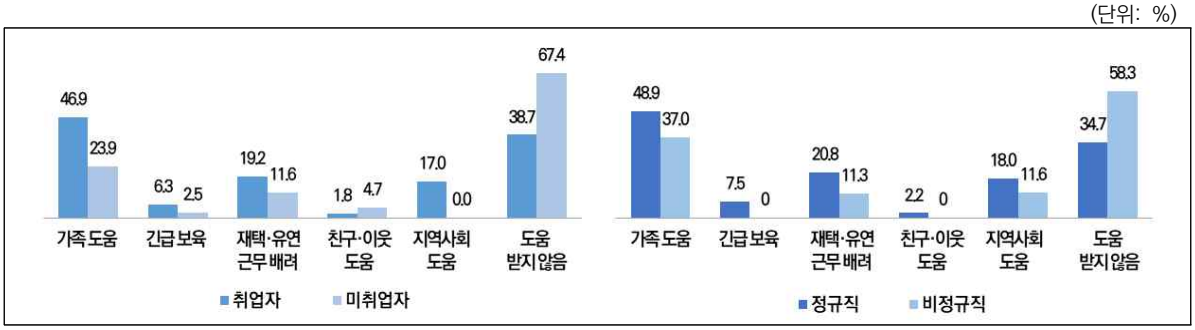
주: 다중응답, 퍼센트는 응답자 수 기준(N=161)

❑ 취업자(129명)는 자녀돌봄 관련 '가족의 도움(46.9%)'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미취업자(32명)는 '도움을 받지 않은(67.4%)'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취업자는 긴급보육(19.2%), 직장의 재택근무 및 자율출퇴근(17%) 등을 활용하였고, 미취업자는 '가족의 도움(23.9%)', '긴급보육(11.6%)' 서비스를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중 정규직(107명)은 '가족의 도움(48.9%)'을 가장 많이 받은 반면, 비정규직은 '도움 받지 않았다(58.3%)'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서 '긴급보육(20.8%)' 및 '직장의 유연근무제(18%)'를 활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1] 취업상태별 돌봄에 대한 도움 기관

(단위: %)



주: 다중응답, 퍼센트는 응답자 수 기준

3) 전체 응답자(1,00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자녀(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장애아 등)가 있는 응답자(161명)를 대상으로 중복응답 분석

⬢ 코로나19 확산은 개인위생 강화와 대면접촉 최소화 등의 생활변화 초래

❑ 마스크 착용, 손 청결관리 증가 등 생활 습관의 변화와 각종 모임 및 여행 · 외출 자제, 다중시설 이용 자제 등 사회활동의 변화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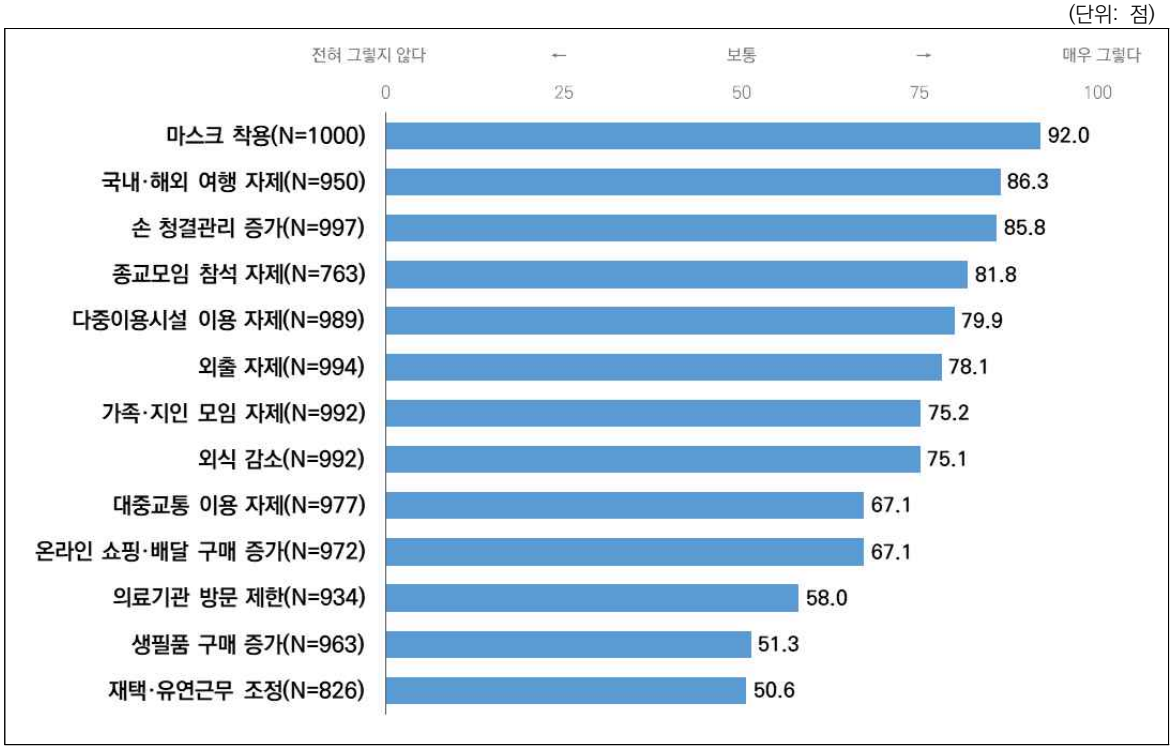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마스크 착용(92.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내 및 여행 자체(86.3점)',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85.8점)', '종교모임 참석 자제(81.8점)'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다중시설 이용 자제', '외출 자제', '가족이나 지인과의 모임 자제', '외식 감소' 등의 항목이 70점 이상, '온라인쇼핑 및 배달 구매 증가', '대중교통 이용 자제'의 항목은 60점 이상으로 나타남
- 반면, '의료기관 방문 제한', '라면이나 즉석밥 등 생필품 구매 증가', '재택, 유연근무 조정' 등의 항목은 60점 미만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노인1인가구, 돌봄자녀동거자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제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

- 노인1인가구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 방문을 강하게 자제한 것으로 보임
- 돌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제한'과 더불어 '온라인쇼핑 및 배달 구매 증가', '생필품 구매 증가', '대중교통이용 자제' 등에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음

[그림 12] 코로나19 위기 관련 생활의 변화

(단위: 점)



⬢ 코로나19 위기 시 인천 시민들의 여가활동은 TV · 온라인 동영상 시청 등 실내활동에 집중

❑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4월 중에 참여한 여가활동은 외출 감소로 인하여 'TV 시청'이 37.6%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온라인 동영상 시청(15.3%)', '휴식(14.9%)', '취미생활(독서, 그림, 화초재배, 요리 등)(10.1%)'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야외활동인 '실외운동(산책, 등산, 자전거타기 등)'은 6.5%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임
-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등으로 외출, 모임 참여를 자제한 결과라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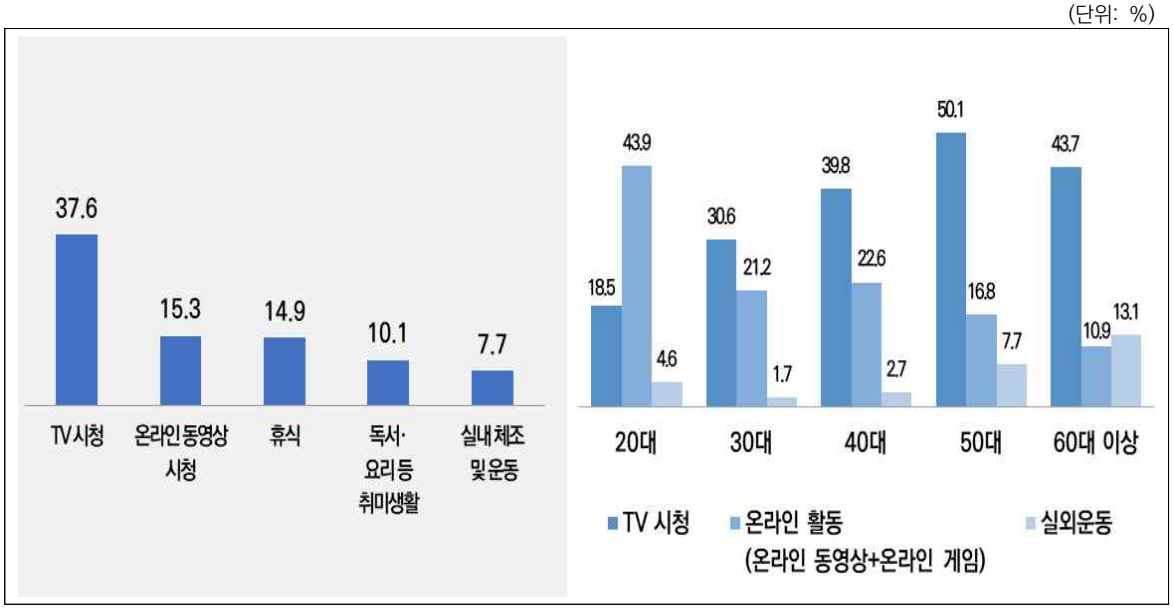
❑ 50~60대는 'TV 시청', 20대는 '온라인을 활용한 여가활동'을 더 선호

- 고연령층일수록 'TV 시청(50대 50.1%, 60대 이상 43.7%)'과 '등산·산책 등 실외 운동(60대 이상 13.1%)'을 선호함
- 20대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시청(27.5%)'과 '온라인 게임(16.4%)' 등 온라인을 통한 여가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여가 활동이 현실 공간(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문체부가 '온라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일상화'를 추진하기로 계획,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온라인 편의성이 떨어지는 경제적 소외층에 대한 접근성도 확보하기로 하고, 지역문예회관·생활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해 '온라인 콘텐츠 상영', '실감형 콘텐츠 순회 전시' 등을 열고, 지역 문화시설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문화 향유가 실제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대한민국정책주간지 공감, 2020.04.13.)

[그림 13] 여가시간 활용 변화

(단위: %)



3 코로나19 위기 대응정책 평가 및 요구

● 코로나19 위기 관련 '온라인 구매'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평가

❑ 각 분야별 사회적 준비 상태 중 온라인 구매(66.9점)에 대한 평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대면(온라인) 회의 및 집회(56.1점), 비대면(온라인)교육(54.4점) 순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 유연한 근무형태(54.3점), 영유아 및 아동 긴급돌봄(53.4점) 정책의 준비 상태에 대해서는 온라인 활용 정책 다음의 보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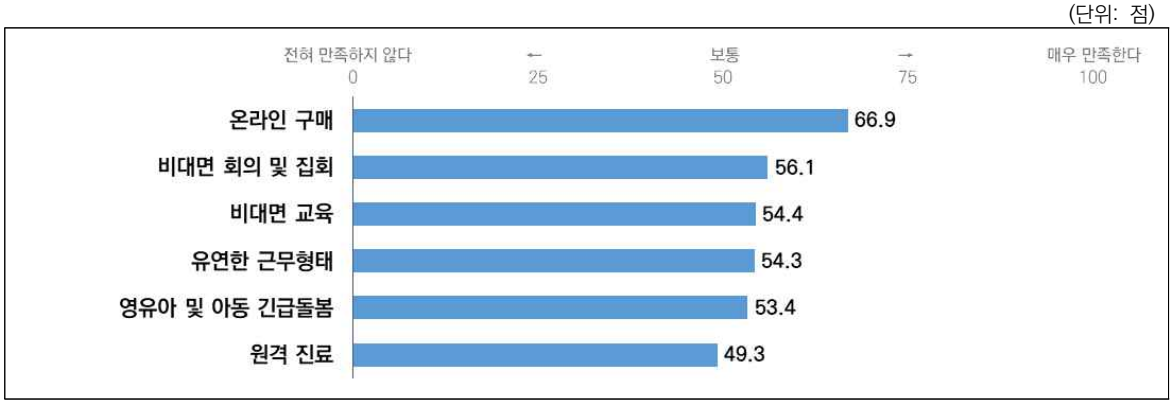
❑ 반면, 그 시행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인 '원격진료(온라인 화상진료)'의 준비 상태에 대해서는 49.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

❑ 자영업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모든 위기대응 사회적 준비 상태를 낮게 평가

- 자영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경험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그림 14]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준비 상태

(단위: 점)



● 코로나19 위기의 대응정책에 대한 인천 시민의 정책인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

❑ 인천 시민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 96% 이상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의 경우 99.9%의 인지도를 보이는 등 모든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96% 이상임

⬢ 인천 시민들은 '감염병 확산방지 정책'을 '경제위기 대응정책'보다 높게 평가

❑ 코로나19 대응정책 중 '확진자 검사 및 동선 공개(79.8점)', '해외 유입자 의무 검사 및 격리(79.2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격리 위반 시 치료비 청구 및 제제(77.0점)' 등 순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정책의 효과를 높게 평가

❑ 반면, '구직·구직급여 등 실업 지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원', '소상공인 및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등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정책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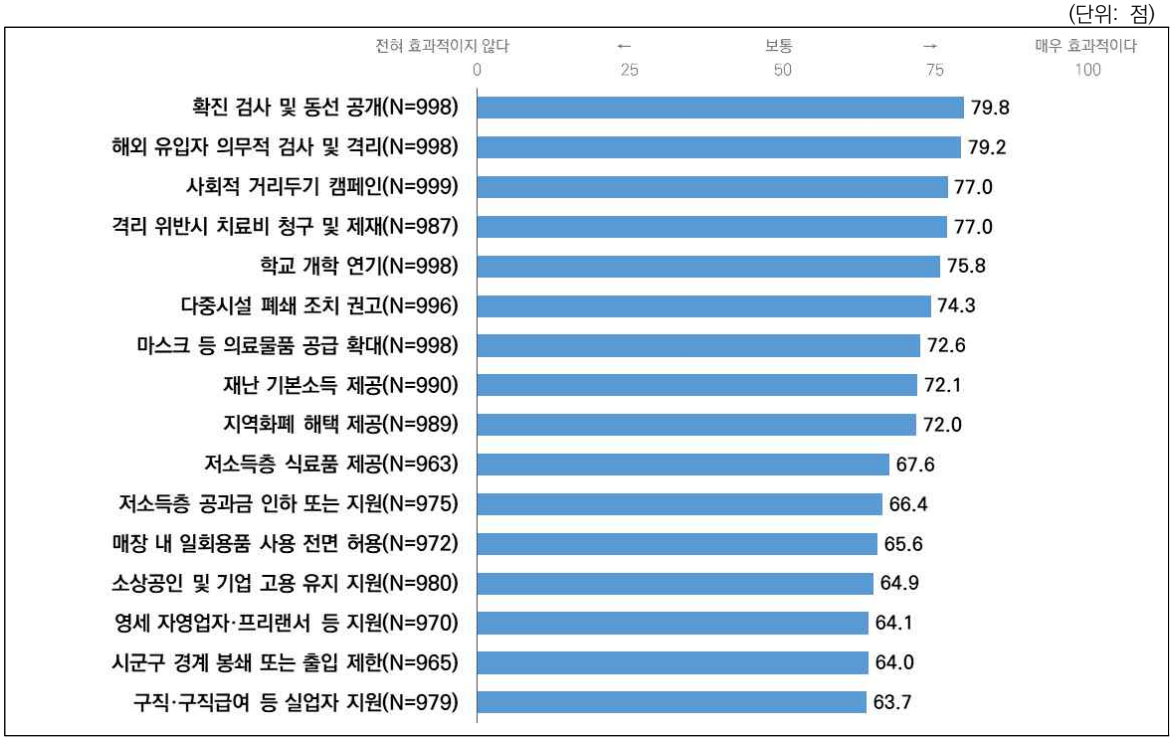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다음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다수에게 혜택을 미치는 대중적 정책(재난기본소득 72.1점, 지역화폐혜택 제공 72점)의 평가가 비교적 높고, 다음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저소득층 식료품 제공 67.6점, 저소득층 공과금 지원 66.4점)임
- 특정 직종이나 특정 계층 지원 정책(소상공인 및 기업 고용유지 지원 64.9점,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원 64.1점, 구직 및 실업 지원 63.7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유관 지원 정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

- 자영업의 경우 '소상공인 및 기업고용유지 지원 정책'에 대해 전체 평균이 64.9점인데 비해 61.8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지원 정책'에 대해 전체 평균이 64.1점인데 비해 60.3점 등 유관 정책에 대하여 오히려 전체 평균보다 비교적 낮게 평가
- 이 또한, 자영업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소득감소, 소비감소 등)을 크게 경험한 탓으로 보임

[그림 15]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의 효과 평가

(단위: 점)



● (경제 · 일자리 분야) 우선적 추진 정책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구

❑ 인천시민은 모든 계층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일자리 분야 정책으로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26.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지역화폐(e음카드) 홍보 및 혜택 확대(캐쉬백 등)' 14.1%, '소규모 자영업자 및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10.8%, '취약계층 생계비 및 공과금 지원' 10.5% 등의 순임
- 이러한 결과는 '생계 및 경제위기'가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가장 큰 피해라고 인식하는 것과 일치

❑ 다만, '재난지원금 지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필요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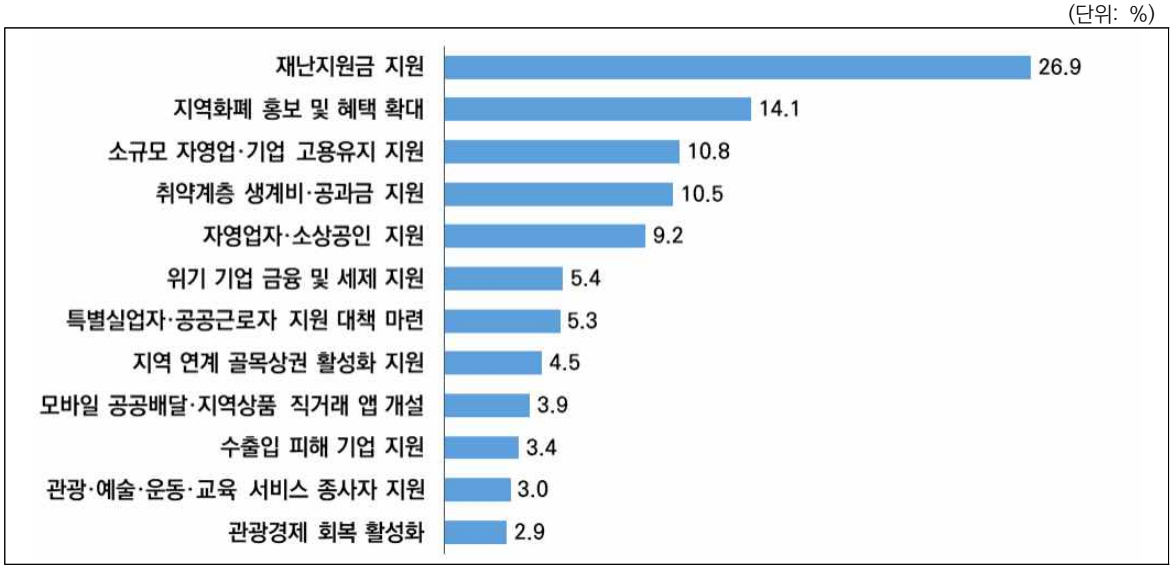
- 20대와 30대에서 각각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21.0%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자영업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자신과 유관한 정책에 대한 요구는 높음

- 다른 직업군 및 고용형태의 경우 '재난지원금' 다음으로 '지역화폐 홍보 및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31.3%)' 다음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29.7%)'을 꼽음
- 반면, 자영업자의 '지역화폐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모바일 공공배달 앱 개설' 등의 정책에 대한 요구는 낮아,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다음으로 '취약계층 생계비 및 공과금 지원(17.1%)'을 2순위로, 비정규직의 경우 '취약계층 생계비 및 공과금 지원(13%), '소규모 자영업 및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12.3%)'등을 2, 3순위로 꼽아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음

[그림 16] 향후 인천시 추진 정책: 경제·일자리 분야

(단위: %)



● (행정·문화·도시생활 분야) 우선적 추진 정책으로 '대중교통 및 관련 시설의 방역 및 안전 강화'를 요구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행정・교육・문화여가・도시생활 분야 정책으로 '대중교통 및 터미널 등의 방역 및 안전 강화'를 응답한 비율이 28.7%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재난 대응 조례 제·개정 및 매뉴얼 정비' 15.9%, '거주지 주변 안전한 여가공간 확충'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및 터미널 등의 방역 및 안전 강화' 정책은 의존도급 및 인턴 등, 낮은 연령대와 같이 대중교통 실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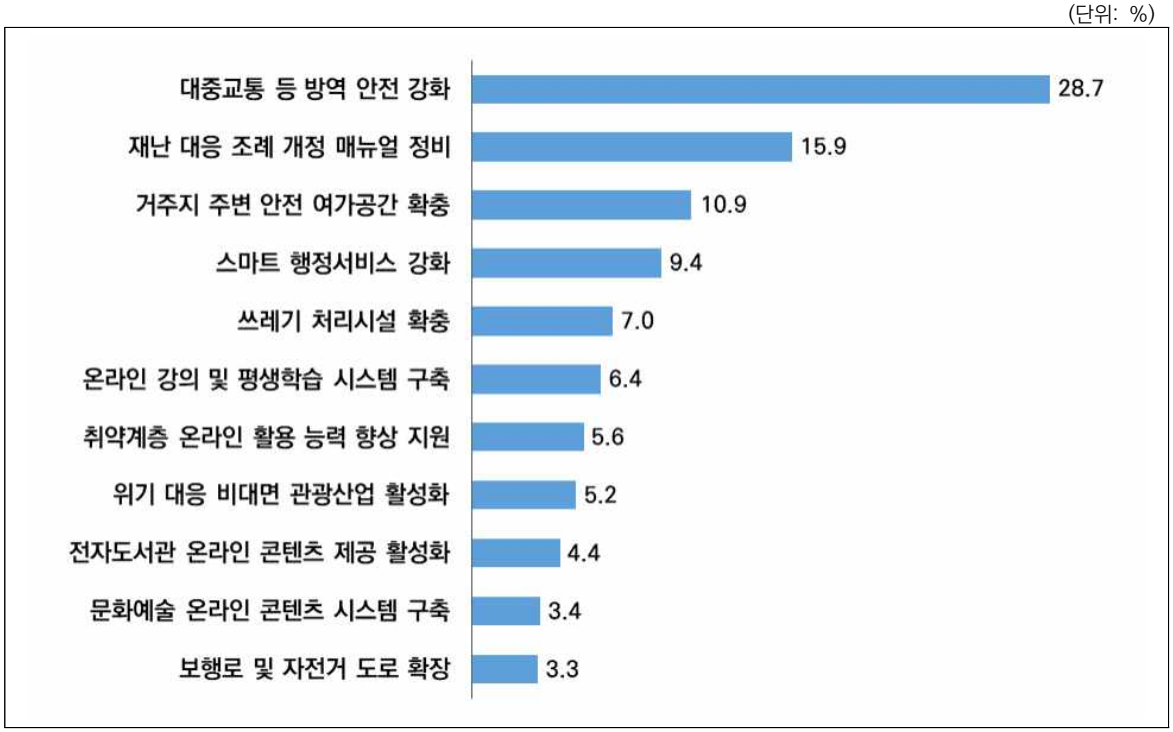
- '대중교통 및 관련 시설의 방역 및 안전 강화' 정책에 대한 수요는 의존도급·인턴·무급가족종사자(44.1%), 그리고 연령이 낮은 20대(34.1%) 등에서 전체 평균(28.7%)보다 높게 나타남

❑ '취약계층 온라인 활용 능력 향상 지원'은 최저소득층에게서 높은 요구

- 코로나19 위기 동안 온라인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온라인 기술 활용 능력이 저조한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이러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17] 향후 인천시 추진 정책: 행정·교육·문화·여가·도시생활 분야

(단위: %)



● (보건 · 복지 분야) 우선적 추진 정책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을 요구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시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을 24.5%로 가장 높게 인식

- 다음으로 '의료물품 공급 확대' 20.0%, '권역별 방역시스템 구축'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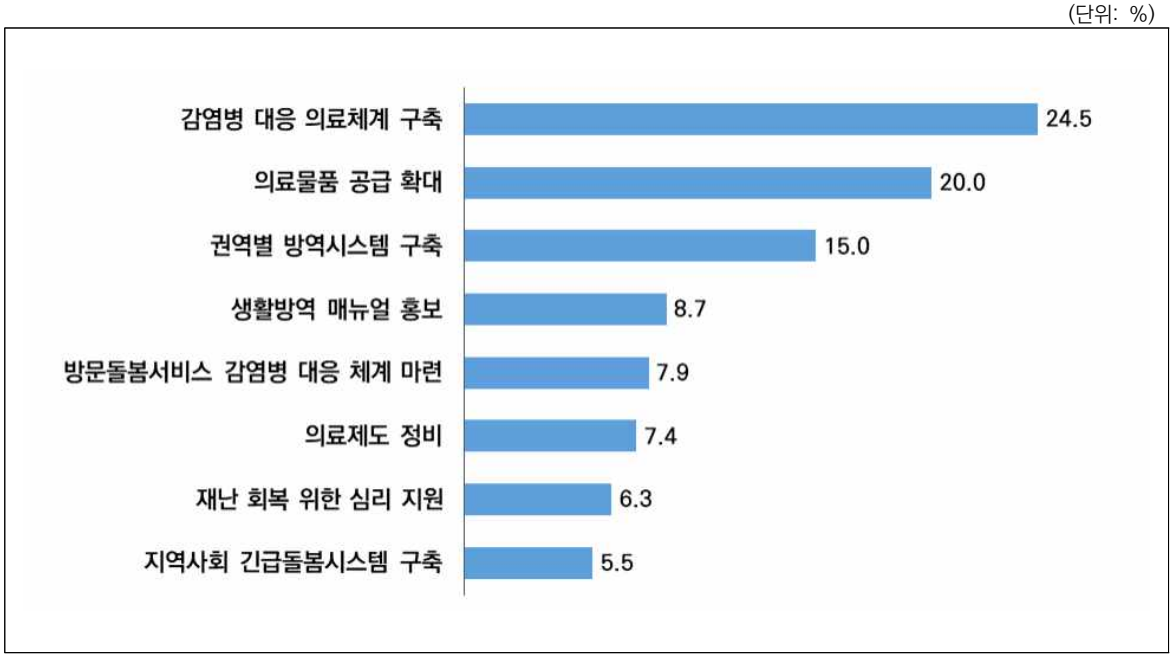
※ 이번 코로나19 위기 뿐만 아니라 향후 닥쳐올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지적(병원신문, 2020. 04. 20.)

❑ 다만, 개인의 여건에 따라 최우선 추진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이

- '권역별 방역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남동구 거주자(21.5%)에게서 높게 나타남
- '의료물품 공급 확대' 요구는 기간제 및 단기 노동자(25.6%)와 미추홀구(24.7%) 및 연수구(25.7%) 거주자에게서 전체 요구(2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재난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에 대한 요구는 소득100만원 이하 가구(16.7%), 동구 거주자(14.4%)에게서 다른 응답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의료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는 강화·옹진 거주자(16.4%)에게서 높게 나타남
- '방문돌봄서비스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는 1인가구(18%) 및 중·동구, 강화·옹진 거주 노인들(26.5%)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고, 비정규직 종사자(11.3%)가 정규직 종사자(7.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함
- '지역사회 긴급돌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30대(11.4%)가 전체(5.5%)보다 높게 요구

[그림 18] 향후 인천시 추진 정책: 보건·복지 분야

(단위: %)



4 정책 제언

⬢ (촘촘한 공적 방역안전망) 공공의료 및 행정체계 정비 정책

❑ 감염 대응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의료 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필요

-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 관리 및 대응 체계 필요

- 재난안내문자 신속성, 정확성 제고
- 위기대응 의료체계 및 방역체계(의료물품 공급망 개편, 비대면 의료상담 및 서비스 체계)
- 대중교통 및 관련 시설 방역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생활 SOC 및 공공시설 방역 및 안전 관리 강화
- 재난 대응 및 관리 행정체계 정비 및 스마트행정서비스 강화

⬢ (경제적 사회안전망) 다층적 경제활성화 정책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다층적 경제회복 정책 필요

-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자영업,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다양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가계의 소득감소로 귀결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지역화폐활성화 등)
- 전반적인 소득감소 회복 정책(재난지원금 제공 등)
- 고용 지원 대책(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 필요

⬢ (심리적 사회안전망) 불안 및 스트레스 완화 정책

❑ 코로나19의 지속과 비대면접촉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 및 스트레스 완화 정책 필요

- 비정규직과 자영업, 돌봄가족, 디지털 취약계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심각

- 심리방역 체계 구축(재난심리지원단, 비대면 상담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방안)
- 비대면 여가활동 지원(온라인 여가활동 콘텐츠 지원 및 주변 여가 공간 방역 강화 등)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비대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재난 대응 돌봄체계 구축(위기대응 가정돌봄/긴급돌봄/방문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 스마트워크 활성화(돌봄 배려문화 조성, 재택 및 유연 근무 활성화)
- 디지털 활용 능력 제고 지원(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 시민생활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김정훈 외(2020). 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19. 경기연구원.

손헌일 외(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 정책 대응, BDI 정책포커스 제372호, 부산연구원.

정규철 외(2020). KDI경제동향. 2020.5, KDI.

[언론보도]

이종현(2020.03.15).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개인정보침해 vs 공익.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3025

[전자문서/웹사이트]

박지혁(2020.06.08.). "코로나19와 슬기로운 소비 생활". 닐슨코리아.
https://www.nielsen.com/kr/ko/insights/article/2020/%EC%BD%94%EB%A1%9C%EB%82%9819%EC%99%80-%EC%8A%AC%EA%B8%B0%EB%A1%9C%EC%9A%B4-%EC%86%8C%EB%B9%84-%EC%83%9D%ED%99%9C/

김청연(2020.04.13.).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공연장·박물관·도서관". 대한민국정책주간지 공감,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ODK7oDGJMP000

최관식(2020. 04. 20.).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방안". 병원신문. http://www.khanews.com

참여연구진

연구 총괄

배 은 주 | 도시경영연구실장

연구 참여

이 미 애 | 연구위원
김 정 욱 | 연구위원
정 혜 은 | 부연구위원
민 경 선 | 연구위원
채 은 경 | 연구위원
조 혜 정 | 연구위원
최 영 화 | 연구위원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이용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